바른미래 '분당 열차' 출발 … 평화·정의 '교섭단체' 제동

4·3 보선 참패 손학규 사퇴 요구에 바른미래당 내홍 폭발
평화당 초선들 "정의당과 함께 못해" 제3지대 향한 발걸음

4·3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도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내부 갈등이 점화하면서 '제3 지대'를 향한 정계개편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8일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는 4·3 보궐선거 참패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당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당 지도부 7명 중에서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광주 광산을) 정책위의장 등 5명이 대거 불참한 것이다. 바른정당 출신의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해 회의에 불참한 반면, 국민의당 출신의 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회의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당내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해 "지금 그만두면 누가 당 대표를 하나.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놈 바꿔라' 하는 것은 어림 없는 소리"라며 "당세를 모아 한국당과 다시 통합한다는 말이 있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마치고 곧바로 비공개회의로 전환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내홍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출신 최고위원들은 앞으로도 최고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직전 손 대표를 찾아와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하지 않으려면 전체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의원들은 보수대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한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 추진까지 거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 바른정당계 최고위원 3명의 보이콧과 무관하게 현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평화당도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정동영 대표가 적극적인데 반해 일부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은 8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의당과 원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는 문제와 관련해 "저하고 가까운 초선 의원 몇 명은 굉장히 회의적"이라며"14명의 소속 의원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즉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 도입 등 노동현안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문제에 있어 정의당과 평화당이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 "저는 하지 말자는 입장"이라며 "박지원, 장병완, 최경환 의원 등 당내에서 최소한 4명 이상이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도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은 정체성에서 다른 점이 크다"며 "한번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깨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역동성이 필요한 평화당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동영 대표 진영에서는 전당원 투표마저 거론하고 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백범 집무실서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에 앞서 경교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교장은 1945년 임시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던 곳이자 김구 선생이 타계 전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한 곳이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시작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문체부,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독립운동 인물 1위 유관순

다수의 국민들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시작'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정부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재조명', '친일 청산' 등을 통해 과거를 정리하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로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미와 관련된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시작'이라는 핵심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시작'은 2만4721건이 검색됐으며 '독립운동가'는 1만7227건을 기록해 그 뒤를 이었다. '일본·친일'이라는 핵심어도 1만3555건으로 언급량 기준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어 '참여'(1만1006건), '대통령'(1만770건), '행사'(9946건), '평화'(6078건), '미래'(5851건), '후손'(4518건), '계승'(2741건) 순으로 언급이 많았다.

독립운동가 재평가 방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어는 '후손에 대한 지원이었다'. 독립유공자 발굴, 공적 전수조사,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친일 청산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핵심어는 '관련자(후손)의 재산 환수'였다. 다음으로 '친일 예술가들에 대한 재평가', '친일 인명 공유' 등이 뒤를 이었다.

독립운동에 대한 집단별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시민', '학생', '여성' 등의 핵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년 전 같은 기간(2016년 9월~2017년 3월) 안중근, 남자현 열사, 애국지사, 함석헌 등 유명 인물에 대한 연관어가 많이 나타난 데 비해 이번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독립운동에 주목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독립운동 관련 인물 연관어로는 '유관순'(4354건)이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김구'(2259건), '안중근'(163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독립웅동가 '이상룡'(537건), 영화를 통해 소개됐던 '김원봉'(632건)에 대한 관심도 부상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독립운동가 한두 사람이 아닌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빅데이터 분석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11만여 건을 대상으로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당 새 윤리위원장 정기용 … 5·18 망언 3인방 징계할까

자유한국당은 8일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정기용 전 윤리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위원장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지검 검사, 법무부 인권과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 경기고 동문에,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에 앞서 김영종 전 윤리위원장이 지난달 전격 사퇴하면서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순례 최고위원과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당이 이날 윤리위원장을 선임하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정기용 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현안들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대통령, 중앙아시아 3국 국빈 방문

16일부터 7박 8일 일정
신북방정책 공감대 확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한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갖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18~21일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또 21~23일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최근 취임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신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카자흐스탄 신정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관계의 호혜적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3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북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